

www.kita.net



# EU 통상정보

2025.02.04

## 「EU 경쟁력 나침반(Competitive Compass)」 주요 내용

브뤼셀지부 (kba@kba-europe.com)

### I 경쟁력 나침반 추진 배경

- EU집행위는 현 집행위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경쟁력 강화 정책인 「경쟁력 나침반(Competitive Compass)」을 통신문(Communication)\* 형태로 발표 ('24.1.29)

\* EU집행위의 추진 정책을 발표하는 공식 문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발표 기점으로 세부 정책 추진 및 입법 작업 본격화

- EU와 미·중 등 주요 경쟁국과의 산업 격차가 계속 심화되자, 현 집행위는 산업 부흥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 절감

○ 본 발표 내용에 따르면, EU는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그린 산업 등 핵심 산업에서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주는 등 지난 20년간 EU의 글로벌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라고 자평

○ 아울러 EU는 저성장이 저소득·낮은 복지 수준으로 귀결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평가, 성장 궤도의 정상화를 위해 그린·테크 산업 등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 강화, 핵심 자원에 대한 자율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

○ 본 통신문 발표에 앞서 '24년 초부터 EU 민관 각계에서는 경쟁력 재건이 시급하다며 신속하고 일관된 경제·산업 추진 촉구

#### 《최근 EU 경쟁력 강화 촉구 사례》

사례	내 용
엔트워프 성명('24.2월)	▶ 유럽 산업계, 차기 집행위에 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산업 정책 도입 촉구
레타 리포트('24.4월)	▶ 엔리코 레타 이탈리아 전 총리, EU 싱글마켓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
EU의회 선거('24.6월)	▶ 보수정당 중심으로 그린딜 위주의 규제 강화 정책 비판
드라기 리포트('24.9월)	▶ 마리오 드라기 전 ECB 총재, EU 경쟁력 재건을 위한 각종 산업·금융 정책 제언
부다페스트 선언('24.11월)	▶ EU 정상, 레타·드라기 리포트에 기반을 둔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 선언문 채택

## II

## 경쟁력 나침반 주요 내용

### (1) 경쟁력 나침반 개요

□ EU 경쟁력 회복을 위해 3대 Pillars(핵심 정책 목표), 5대 Horizontal enablers(촉진 정책과제) 제시

- (3대 Pillars) EU가 경쟁력 나침반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, 각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입법·전략 과제 추진
- (5대 Horizontal enablers) 시장 접근성 강화, 규모의 경제 실현, 혁신에 필요한 자금 조달 편의성 강화, 인력 육성, 회원국간 조정기능 강화 등 EU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핵심 정책 과제 추진



그래픽 : EU집행위 발표자료

□ EU는 상기 정책을 통해 변함없는 그린딜 추진과 함께 관련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 시도

### (2) 「3대 Pillars」 주요 내용

① (혁신 격차 해소) 스타트업은 파괴적 혁신을, 기존 시장지배력 보유 기업은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유도하며 생산성 향상 선순환 사이클 회복

- 혁신 격차 해소를 위해 스타트업 지원, 규제 단일화, AI·양자역학·바이오·우주 등 핵심 산업 지원 등을 포함한 13가지 입법·전략 과제 추진 예정

#### 《혁신 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·전략 추진 과제》

입법·전략(발표 시기)	주요 내용
스타트업·스케일업 전략('25년 2분기)	▶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및 스케일업을 억제하는 요인* 진단 후 대응 전략 제시 * 산학 관계, 부진한 특허 상업화 및 인재 유치, 자본 조달 미흡, 싱글마켓 분절화 등
유럽혁신법('26년 1분기)	▶ 역내 혁신기업의 EU 연구·테크 인프라·공공 펀드로 창출된 지식 재산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규제 샌드박스 적용 확대
28번째 법률체제('26년 1분기)	▶ 27개국 회원국의 상이한 법률(법인법, 파산법, 노동법, 세법 등)을 통합하고 간소화

입법·전략	주요 내용
유럽연구분야법('26년)	▶ GDP 대비 3% 수준의 R&D 투자 목표, EU·회원국간 R&D 투자 우선순위 설정, EU 내 핵심 기술·인재 확산 추진
AI팩토리 이니셔티브('26년 1분기)	▶ 유럽 레벨의 AI네트워크 확장 추진, EuroHPC 슈퍼컴퓨터를 기반으로 컴퓨팅 능력을 개선하여 민간 차원의 AI모델 개발 지원
AI 적용, 과학·데이터 연합 AI 전략('25년 3분기)	▶ (과학·데이터 연합) 민간·공공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및 관련 규제 정비 ▶ (AI 적용) 제조·자동화·에너지·로보틱스·제약·항공·금융·공공헬스케어·법률 서비스 등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 확대
EU 클라우드·AI 개발법('26년 1분기)	▶ 민간 차원의 AI 학습능력 강화를 위한 AI 기가팩토리 설립 지원 ▶ EU 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최소 기준 마련 ▶ 반도체 설계·제조 역량 강화
EU 양자기술전략('25년 2분기) EU 양자기술법('26년 4분기)	▶ 기존 반도체법을 기반으로 분절화된 관련 규제 진단 ▶ EU·회원국 차원의 일치된 방향으로 육성 프로그램 및 투자 추진
유럽바이오테크법·바이오전략('25년~'26년) 생명과학전략('25년 2분기)	▶ (바이오테크법) 헬스테크 개발·임상 실험 기준 등에 선진화된 프레임워크 적용 ▶ (바이오전략) 바이오 기반 소재·제조기술·바이오화학·바이오농업 분야 성장 촉진
첨단소재법('25년 2분기)	▶ 스타트업의 연구·제조 등에 활용되는 첨단소재를 확산하도록 지원틀 마련
우주법('25년 2분기)	▶ EU 레벨의 우주 관련 안전 기준 및 지속가능한 우주산업 기반 확립, 회원국별로 분절화된 기준 조정
합병 가이드라인 개정(미정)	▶ EU 기업들이 산업·기술의 글로벌 혁신 트렌드 및 역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핵심 산업 분야 합병의 경우 기준 완화 개정 검토
디지털 네트워크법('25년 4분기)	▶ EU 내 디지털 네트워크(광케이블, 위성 네트워크, 6G, 클라우드 서비스 등) 구축 시 인센티브 제공 및 규정 준수 비용 절감 지원

## ② (그린딜 및 경쟁력 강화) 기후 이슈에 대응하고 저렴한 에너지 수급을 위해 기존 그린딜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하되, 그린딜 추진으로 역내 산업 경쟁력이 후퇴하지 않도록 산업 정책 강화

-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역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산업계에 대한 피해가 누적, 러시아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EU의 취약한 에너지 구조를 역내 자급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개편하며 에너지 가격 안정 추진
- 그린딜 추진과 동시에 관련 넷제로 산업 육성과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해 산업·경쟁·경제·무역 등 전방위 지원 정책 추진, 벤치마킹·라벨링 제도, 공공조달·금융 인센티브 정책 활용
- 그린딜 및 경쟁력 강화 동시 추진을 위해 청정산업법, 에너지 가격 안정 계획, 신보조금 체계, 순환경제법, 기후법 수정 등을 포함한 16가지 입법·전략 과제 추진 예정

### 《그린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·전략 추진 과제》

입법·전략	주요 내용
에너지 가격 안정 계획('25년1분기)	▶ 가정·기업 전력 수요자와 직접 전력 구매 계약 및 역내 전력시장 통합으로 에너지 가격 인하 유도 ▶ 전력 시장에 대한 공적 지원과 산업 전력 수요 변동에 대한 유연한 대응으로 전력 장기 계약 활성화, 전력 요금체계 개편 추진 등
전기화 행동 계획 및 그리드패키지('26년1분기)	▶ 역내 수소, 탄소포집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단일시장 수준의 에너지 운송·분배·저장 인프라의 현대화 추진

입법·전략	주요 내용
청정산업딜('25년1분기)	▶ 그린딜 실현 및 청정 산업 육성 관련 산업·경쟁·경제·무역 등 전방위 정책 추진 ▶ 청정산업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한 지원책 제시 및 회원국 차원의 세제 정비 유도
산업계 탈탄소화 가속법('25년4분기)	▶ 에너지집약 산업군의 탈탄소전환 지원을 위한 인허가 절차 신속 처리
철강·금속산업 행동 계획('25년)	▶ 글로벌 과잉생산 및 산업구조 재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역내 철강·금속 산업 지원 - 투자 수요 파악 및 지원, 1·2차 원자재 확보 지원, 무역방어 수단 등 활용
화학산업패키지('25년4분기)	▶ 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전성 확보, 핵심화학물질 공급선 확보 등
자동차산업을 위한 전략대화 및 산업 행동 계획('25년1분기)	▶ 역내 자동차산업계와의 대화 추진('25.1.30 발족)을 통해 CO <sub>2</sub> 규제 적용, 투자 장려책 등에 대해 집행위-업계간 의견 조율 - 업계 의견을 기반으로 액션플랜 설정(수요·공급 측면 장려책, 내연차 판매규제 조치에 e-fuel 예외 적용 포함, 기술중립성 강화 등) - 글로벌 공정 경쟁 환경 조성, 규제 단순화, 핵심 자원에 대한 접근성 강화, 역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·전기차 수요 촉진(법인차량 친환경화 유도)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산업 지원책 추진
지속가능한 운송수단 투자 계획('25년3분기)	▶ 전기 충전 인프라 확산,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운송 연료 생산과 유통 확대를 위한 인프라 투자 장려
항구 전략 및 해운 산업 전략('25년)	▶ EU 항만시설의 현대화 및 해운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제시
고속철도 계획('25년)	▶ EU 역내 회원국간 접근성 증대를 위한 고속철도 네트워크의 확장
탄소국경조정제도 검토('25년)	▶ 본 제도를 우회하여 탄소를 누출하는 사례 방지 및 역내 산업이 글로벌 탄소 누출 관련 불공정 경쟁으로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제도 검토 ▶ 적용 대상 산업 및 하위 제품군 확대 검토와 관련 제품 수출시 영향 평가 시행
신지역보조금 체계('25년2분기)	▶ 회원국 각 지역별로 청정기술 전환 가속화를 위해 지역 보조금 체계 개편
순환경제법('26년4분기)	▶ 재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신규 원자재 사용량을 절감하고 폐기물 매립 감축
농업 및 식품 비전('25년1분기)	▶ 농업 분야의 장기적인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
해양 협정('25년2분기)	▶ 해양 지역 및 해안을 활용한 신청정기술 개발, 청정 에너지 생산, 식량 안보 증진
기후법 개정('25년)	▶ 기존법 검토를 통해 EU의 글로벌 기후 리더십 강화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촉진

### ③ (공급망 안보) 특정 국가·지역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공급망 체계를 정비, 기업들의 안정적 역내 투자를 유도하고 방위산업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자체 공급망 역량 구축

- 다양한 국가·지역과의 무역협정 추진과 동시에 공공조달 지침 개정을 통한 역내산 우대 등 보호무역조치 강화
- 고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과잉 유발하거나 자국에 의존적인 공급망 체계를 구축 중인 국가·지역에는 정책 믹스로 대응
- 타 국가 제품·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방위산업 역량 개선을 포함, 공급망 안보를 위해 11가지 입법·전략 추진과제 제시

## 《공급망 안보를 위한 입법·전략 추진 과제》

입법·전략	주요 내용
무역협정 체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산업 전방위 분야에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우방국들과 무역협정 체결 추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Digital Trade Agreements(싱가포르 체결, 한국과 협상 중)</li> <li>-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(호주, 캐나다, 일본, 뉴질랜드, 스위스, 미국 등과 협력으로 규정 준수비용 감소)</li> <li>- Sustainable Investment Facilitation Agreements(앙골라 체결)</li> <li>- Clean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(핵심 원자재·청정 에너지, 청정 산업 확산을 위해 투자·규제 관련 역외국과와 협정 추진)</li> </ul> </li> </ul>
지중해 연안 에너지 및 청정기술 협력 이니셔티브('25년4분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지중해 연안 지역 재생에너지 개발·보급을 위해 대규모 공공·민간 투자 촉진</li> </ul>
핵심 원자재 공동 구매 플랫폼('25년3분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EU 차원에서 회원국별 핵심원자재 수요 통합 관리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 중인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선 다변화 추진</li> </ul> </li> </ul>
핵심 의약품법('25년1분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핵심 의약품 및 원료의 안정적 공급선 확보와 대외 공급 의존도 축소</li> </ul>
공공 조달 지침 개정('26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특정 역외 국가의 보조금 정책에 따른 과잉 저가 공급 및 시장 접근 제한 조치에 대응하고 EU 역내 산업 기반을 보호 목적</li> <li>▶ 핵심 산업 및 기술 분야 공공조달 시 역내산 우대,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혁신 스타트업의 조달시장 접근성 강화</li> </ul>
EU 방위 미래 백서('25년1분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EU 역내 방산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부터 생산까지 공급망 구축, 회원국간 공동 조달 추진</li> <li>▶ Defence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 추진 통해 방산 분야 중소기업의 금융 조달 지원, 역내 방산 시스템 통합 등 지원</li> </ul>
대비 연합 전략('25년1분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비상물자 구축, 공동 공공조달 추진 등으로 EU 차원의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공급망 위기 및 유사 상황 대응력 강화</li> </ul>
내부 안보 전략('25년1분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온·오프라인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포괄적인 EU 대응 방안을 EU 규정·정책에 반영</li> </ul>
EU 기후 적응 계획('26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기후 위험 평가 정기적 시행, 핵심 인프라와 도시 계획에 기후 회복력 요소 반영, 자연 기반 해결책 도입 추진</li> </ul>
수자원 복원력 전략('25년2분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수자원 이용 효율성 및 관련 인프라 개선,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전략 제시</li> </ul>

### (3) 「5대 Horizontal enablers」 주요 내용

#### ① (규제 단순화) EU 내 투자 기업들 중 약 2/3가 투자 장애 요소로 지목한 과도한 규제 완화를 위해, EU·회원국·지방 정부 등 모든 차원에서 행정처리 가속화를 위해 규제 단순화 추진

- (규제 단순화 집행위원 임명) EU집행위 최초로 규제 단순화를 위한 집행위원(발디스 돔브로브스키)을 임명했으며, 법률 통합·간소화·체계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(구체적 이행 방안 등은 '25년 2월 발표 계획)
- 집행위 부처별 집행위원들도 매해 두 차례에 걸쳐 각 분야 이해당사자들과 회의를 개최, 기업들의 행정부담 완화 및 규제 단순화를 위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
-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준수 행정처리 부담은 각각 최소 25%, 35% 경감시킬 계획
- 탄소중립 관련 핵심 산업 및 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신속 인허가 행정처리 지원
- 단일시장으로의 규제 조화를 위해 집행위 차원에서 필요시 강력한 조정수단 활용

- (REACH 개정) EU 화학물질 관리규정인 REACH 개정을 통해 위험 화학물에 대한 신속한 판정 처리를 지원하고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적용 기준 단순화
- (헬스케어 산업) 의약 및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규정 및 기준도 단순화되도록 지원
- (규제 도입 시 영향평가) 새로운 규제 도입 시 유발되는 비용을 글로벌 수준과 비교하기 위해 중소기업·경쟁력 영향평가 시행

#### 《규제 단순화를 위한 세부 추진 정책》

입법·전략(발표 시기)	주요 내용
옴니버스 규제 단순화 및 중견기업 기준('25.2.26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옴니버스) 공급망실사지침(CSDDD),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(CSRD), 탄소노미(Taxonomy) 대상으로 기업들의 중복 보고의무를 해소</li> <li>▶ (중견기업) 중견기업 규모의 기준을 명확히 해 중소기업처럼 규제 적용 완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26년 1월부터 본 이행기간에 접어드는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에도 중견·중소 기업 적용 기준 완화 추진</li> </ul> </li> </ul>
유럽 비즈니스월렛('25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역내 기업들의 공공 기관 제출 서류 등을 전자화하기 위해 비즈니스월렛 도입</li> <li>▶ 비즈니스월렛을 통해 인보이스, 서명, 제출, 제품별 전자패스포트(배터리 등) 등에 활용</li> </ul>

### ② (단일시장 기능 강화) 역내 시장규모 확장, 에너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회원국 간 단일시장 형성 추진 및 장애 요소 제거

- 지난 30여 년간 단일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했지만, '2025 단일시장·경쟁력 보고서'에 따르면 EU 차원의 단일시장 추진은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
- 레타 리포트에 따르면, 전자 통신, 에너지, 금융 시장, 방위 산업 등에서 단일시장을 형성해야 경쟁력 회복이 가능하다고 제언
- 강화된 '단일시장 강화 태스크포스(SMET)' 및 향후 추가 조치 등을 통해 단일시장 형성을 저해하는 요소 및 EU 입법조치 조정

#### 《단일시장 기능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 정책》

입법·전략(발표 시기)	주요 내용
기준표준화 개정('26년)	▶ 산업별 신속한 기준 제정을 통해 첨단산업(5G·6G 통신, AI, 재생에너지 기술, 전기차 충전 인프라, IoT 등) 분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시장 접근성 강화
단일시장 전략('25년 2분기)	▶ 단일시장 형성에 필요한 거버넌스를 현대화하여 회원국간 협력을 유도하고, 단일시장 형성을 저해하는 기존 장애요소 제거, 신규 장애요소 창출 방지

### ③ (금융경쟁력 회복) EU는 청정 전환, 디지털화, 산업 혁신 등 전방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 재원이 필요하며, 동 자원 확보를 위해 역내 저축·투자 연합 추진, 재정 집행 효율화 등 추진

- (자본시장 통합) EU의 분야별 산업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자원 조달이 필요하며, EU·회원국은 민간·공적 투자자금이 효율적으로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입되도록 자본시장 통합 필요
  - درا기 리포트는 EU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연간 7,500-8,000억 유로(EU GDP 대비 매년 5%p 증가)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
  - EU의 가계저축률은 '22년 기준 미국 대비 65% 높은 수준이나, EU의 분절된 금융시장 구조에 기인한 낮은 수익률로 인해 역내 투자로 유입되기보다 매년 3천억 유로가 역외 투자로 유출
  - 역내 산업 혁신을 위한 벤처·자본 투자는 과도하게 은행 대출을 통해 조달되고 있으며, 민간 영역의 투자는 지지부진



- **(재정집행 효율화)** EU 자금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순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집행 방식을 효율화
  - EU는 3가지 핵심 산업\*에 대한 집중 투자를 위해 ‘STEP규정(STEP Regulation)’을 통해 11개의 개별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분산된 예산을 통합 지원 중
    - \* 디지털 기술 및 딥테크 혁신, 청정 기술 및 자원 효율 기술, 바이오 기술
- **(유럽투자은행(EIB) 역할 강화)** 민간 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해 경쟁국과의 투자 규모 격차를 해소하도록 EIB의 역량을 강화
  - InvestEU 프로그램 펀딩 조달 시 총 2,180억 유로 중 65%가 민간 자본이며, 민간 투자액에 대한 공공 위험 분담 및 보증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(공공 보증액의 15배 규모의 민간 투자 유치)
  - 핵심 분야에 대규모 투자 지원을 위해 EU 자원과 결합된 보증, 대출, 혼합형 금융, 지분투자 방안 모색

#### 《금융 경쟁력 회복을 위한 세부 추진 정책》

입법·전략(발표 시기)	주요 내용
저축·투자 연합('25년 1분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민간 투자자를 위한 EU 차원의 저비용 저축 및 금융 상품 마련하고 연금 투자 재원이 성장성 높은 산업에 투자되도록 유도</li> <li>▶ 역내 금융시장 통합을 저해하는 회원국별 과세 장벽 등 제거 추진</li> <li>▶ 은행의 자금조달 능력을 지원하여 기업에 대한 대출 활성화</li> <li>▶ 회원국별로 분절화된 기업 파산 절차 통합</li> </ul>
차기 다년도 재정정책('25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차기 MFF(Multi-annual Financial Framework)을 통해 경쟁력 회복에 예산 집중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– 현재 EU 예산은 다수의 지원 프로그램에 분산되어 있어 핵심분야에 대한 공공기금 투입 효과가 낮고, 기업 입장에서 기금 신청 및 사용절차가 복잡함</li> <li>– EU 경쟁력 기금(European Competitve Fund)을 신설하여 AI, 우주, 청정, 바이오 등 기술·생산 분야에 지원 자금이 집중되도록 유도</li> </ul> </li> </ul>

#### ④ (고급 노동력 공급 및 일자리 확보) EU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직업역량 강화, 노동시장의 이동성 개선, 경제활동 참여 인구 확대, 사회보장제도 현대화를 추진

- EU의 고용 환경은 양호하나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직업역량 강화와 함께 인구 고령화·청년 노동인력 감소에 대응 필요
  - ‘23년 기준으로 EU 내 고용 인구는 2억 1,650만 명으로 증가, 고용률이 75.3%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 수준의 6.1% 실업률을 기록
  - 그러나 EU 내 중소기업의 80%가 적절한 기술을 갖춘 인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숙련도 격차(Skills Gap)는 여전히 존재

#### 《고급 노동력 공급 및 일자리 확보를 위한 세부 추진 정책》

입법·전략(발표 시기)	주요 내용
기술 연합('25년 1분기)	▶ 일자리 수요와 직업 역량 조화를 위해 평생학습, 직업역량 유지 및 개발, 역내 노동력 이동 원활화, 직무전환 유연성 제고 추진
양질의 직업 로드맵('25년 4분기)	▶ 나이 및 성별을 불문하고 노동가능 인력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·임금 수준 등을 개선
기술 이전 이니셔티브('26년)	▶ 전문 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비EU 인재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Talent Partnerships (인재 파트너십)과 EU Talent Pool(EU 인재 풀)을 구축

## ⑤ (회원국간 조정기능 강화) ‘경쟁력 조정 수단’을 도입해 EU 최우선 과제에 EU 자원 집중 투입

- EU집행위는 회원국과 함께 산업정책 우선순위를 조율하여 EU 공동 경쟁력 강화를 추진
  - － EU 공동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기존 회원국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산업 정책을 EU의 연합된 레벨에서 추진
  - － EU 예산을 경쟁력 강화 우선순위에 집중하고 동 예산이 타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과의 ‘투자연합’으로 집행되도록 유도
- EU 집행위는 회원국과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, 디지털 인프라, AI, 생명공학, 핵심의약품 생산 등 일부 산업군에 정책 조정을 시범 적용할 계획

### 《회원국간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 정책》

입법·전략(발표 시기)	주요 내용
경쟁력 조정 수단(‘25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‘경쟁력 조정 수단’을 도입하여 EU 차원의 산업 및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EU 자원을 배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－ 회원국간 협의를 통해 EU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·연구·투자 분야의 공통된 우선순위 설정</li> <li>－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젝트의 R&amp;D, 산업적용 및 제조 등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지원 방식(보조금, 대출, 지분투자, 조달 등)으로 예산 집행</li> <li>－ 경쟁력 조정 수단 관련 예산은 ‘28~‘34년 다년도재정운영계획(MFF) 내 신경쟁력 기금(a new Competitiveness Fund)을 통해 신규로 수립</li> </ul> </li> </ul>